

수입농산물과 우리농산물

외국농산물에 우리건강 맡길수야



황 민 영
한국농어민신문 주필

이 시대 우리농업의 최대과제는 농산물 수입의 확대를 막아내는 일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이다.

그것은 수입농산물의 확대가 결국은 우리농업을 파산시키게 되어 농민의 생존권을 앗아갈 것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수입농산물은 그 자체가 갖는 속성, 가격경쟁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농산물은 포스트하베스트농약처리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에 비하여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수입 밀의 다량 농약검출이나 바나나, 자몽 등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이상의 검출은 수입농산물의 불안전성을 사실로 증명하고 있다.

지난 2월3일 보건사회부는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미국산 백맥(白麥) 1만 9백 6톤에서 치오파네이트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 0.05ppm보다 132배나 높은 6.617ppm이 검출, 폐기나 반송조치를 한바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농산물의 대부분이 철저한 검역을 받지 않은채 통관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문제되고 있는 밀과 같이 현지에서 검역이 되지않은채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됨으로써 국내 검역진의 검사에 의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는 불평등 계약이 지금까지 관행화되어 왔다는

엄청난 사실이다.

이것은 지난해 목포항을 통하여 들어온 밀에서 동종의 치오파네이트 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문제되었지만 한편으로 같은 내용의 밀이 인천항을 통해서도 무사 통관, 이미 밀가루화되어 빵, 과자, 라면의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산 고추에서 고독성 농약인 EPN이 허용기준치 0.1ppm보다 높은 0.36~0.72ppm, 마른파에서 BHC농약이 0.82ppm검출, 마른당근에서 디엘드린 농약이 허용기준치보다 무려 60배나 많은 0.6ppm, 그리고 일본산 수입돔에서도 납성분이 허용기준치 2ppm보다 높은 3.46ppm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처럼 수입농산물에서 다량의 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은 재배과정에서 농약과 다사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수확후 상품화 과정에서 해충방지, 부패방지, 싹틔움방지, 선택유지등 상품성을 유지,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들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스레몬의 저장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다이옥신(2,4-D) △콩의 살충제로 쓰이는 파라치온, △바나나의 살충과 부패방지를 위한 메틸브로마이드, 테믹, △냉동감자의 싹틔움방지제 CPC △자몽의 낙과방지및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다미노자이드(알라) △오렌지 농축액에서 살충·

살균제의 다이옥신, 방사선(코발트 60, 세시움 137) △옥수수에서 아플라톡신 B₁의 검출등은 이제농산물 수입천국이 될 한국국민으로서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번 부산검역소가 미국산 밀에서 농약을 검출한 일이나 각종 중국산 저질농산물에서 유해물질을 조사하여 반송, 폐기하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우리도 검역장비, 인원, 전문성을 갖추기만 하면 유해한 농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원천적으로 수입농산물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수입농산물이 대규모 면적의 대량생산이후 대량 장기간 저장, 원거리 수송, 보관 과정이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벌레를 죽이고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며 싹틔름을 방지하려면 화학물질처리등을 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검역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로(0)」가 아니라 허용기준치라는 각나라마다 상이한 수치를 놓고 높여라 낮춰라 하면서 피나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식량의 자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검역소의 검역방법도 사람의 오관을 이용한 관능검사가 전체의 45%, 단순 서류검사가 22%, 그리고 실질적 농약잔류검사

인 이화학 검사는 33%에 그치고 있고 그것도 「샘플검사」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 농산물만 문제인가. 수입쇠고기에서 성장ホルモン, 항생물질의 검출, 뉴지산 홍합에서 중금속의 검출, 미국산 스테류에서 산화방지제인 브틸히도록시아니를 검출, 홍콩산 불고기 양념소스의 소금농도 기준치 초과, 프랑스산 키위시럽에서 허용의 색소(황색 13호, 청색 5호), 멕시코산 알데히드, 소르빈산 칼륨, 일본산 단무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반송 조치된바 있다.

우리가 식품의 안전성을 따지는 것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이다. 신선도, 영양가, 가격도 중요하지만 식품의 기본은 안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의 재배, 동물의 사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농약을 사용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도 허용기준치,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농약 사용으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을 방지하지는 것이다. 재배과정, 사육과정에서도 이처럼 철저한 농약, 항생제의 사용관리가 요청되는데, 하물며 수확후 상품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장사속」으로 농약을 무자비하게 사용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간접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미국 농무성 관리가 한국배를 수입하면서 한국땅에 와서 토양을 검사하고 재배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합격판정을 내리고도 못미더워 현장에서 배를 돋보기로 하나씩 하나씩 검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한 철저한 검역자세를 우리는 지독하다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수입농산물 홍수시대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외국농산물 수출업체들은 생산자 단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그들 나라 농산물의 우수성, 안전성을 홍보, 선전하고 가격 덤핑을 치면서 수출시장 확대에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농산물의 불안전성을 은밀히 알려 주면서 소비자를 헐박해 오고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결국 UR농산물협상은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강대국의 갈등이 조정되면서 타결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89년에 가트 BOP(국제무역수지 위원회) 졸업에 따라 97년까지 쌀을 포함한 기초식량을 제외하고는 수입개방을 약속하고 있고 현 추세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농지제도, 가격정책, 양정제도인 조건에서 3~4년내에 쌀마저도 공급부족으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수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다. 하물며 다른 품목의 농수축산물, 약초, 화훼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은 수입확대저지의 안전핀은 될 수 없고 국내 생산기반의 강화를 통

한 물량면에서 최대의 자급기반 확보와 가격면에서 경쟁력 확보에 농정의 최대역점을 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차피 경제발전과 소득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지향, 안전지향, 신선지향, 자연지향의 식생활에 대한 질적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농약으로 인한 농산물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들은 개방화시대에 농산물의 안전성은 완전성을 지향하는 마음가짐으로 생산, 유통, 가공에 임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나가야 수입 농산물의 공세에서 생존할 수 있다.

이점은 생산자들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는 물론이고 농약생산, 판매,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동노력, 소비자들의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포스트하베스트 농약처리로 인하여 안전성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수입농산물은 애용하면서 안전성면에서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멀리 하는 한 우리농산물은 쇠퇴할 수 밖에 없고 안전성도 점점 나빠지게 되며 종래에는 외국농산물에 국민의 생명, 건강을 내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인간이 세계를, 지구를, 천체를

지배하는 것은 정신, 과학의 발전이다. 과학, 물질의 발전은 인류의 존엄성을 반영하는 수단으로서 끊임없이 추구되는 것이다.

하나의 자연, 하나의 지구를 인간이 영원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 지속농업, 환경농업의 주체도 그렇고 인간이 더불어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 기본수단으로서 식량의 안전성, 안정적 공급기반의 확충은 농업의 최대 가치이며 기계, 화학의 과학기술이 담보해 내야할 최대의 숙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농약정보

'93 책의 해

「한국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이 지은 <농촌사회경제총서>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됐다. 시리즈로 발간되고 있는 이 책들은 아래에 소개하는 1~3집 외에 4집 <농업인력올바른 인식과 대책>이 최근 발간됐고, 농지제도를 다룬 5집은 10월경, 농산물유통을 주제로 한 6집은 12월경 발간될 예정이다.

(1집) 쌀·어떻게 지킬 것인가

쌀시장은 개방될 것인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쌀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중앙대 金成勳교수를 비롯, 8명의 전문가가 6개월의 연구와 토의를 거쳐 공동집필한 이 책은 쌀의 생산·소비·유통·수매 및 방출정책, 세계쌀시장의 특성, 미국·일본의 쌀생산 및 소비정책, 쌀시장 개

방에 따른 국민경제적 영향에서부터 쌀이 과연 남아도는지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자세에 이르기까지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깊이있게 다뤘다. <신국판 312쪽>

(2집) 소·개방의 갈등과 새로운 도전

韓牛가 이 땅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국내소비량의 56%를 수입쇠고기가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개방이 진전될 조짐이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희망을 잃은 농가가 한우 사육을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적 상황에서 전국대 金榮喆교수를 비롯, 8명의 교수진이 공동집필한 이 책은 한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있어 수입개방의 파고에서 우리소를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말에는 한우에 얽힌 우리민족의 정서와 애

환도 함께 묶었다. <신국판 276쪽>

(3집) 농업과 환경·지속적 발전의 과제

최근 농업정책의 세계적인 조류는 중산정책·구조정책으로부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조화형 농업 또는 지속적 농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지속적 농업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환경조화형 지속적 농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이 농업과 농업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성균관대 吳浩成교수를 포함, 6명의 전문가가 공동집필한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함께 지속적 농업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국판 292쪽>

농민신문사 발행, 각권 6,000원, 구입문의 (02)720-9852